

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디자인보다는 공공성을 높이자

이 소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공공디자인에 주력하는 단체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시 및 지역의 문화적, 심미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도시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보겠다는 발상에서 비롯한다. 실용정부의 국정과제로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디자인 정착 등이 제시됨에 따라, 자치단체들간 디자인 경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자치단체별로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마다 다양한 공공디자인 관련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 디자인으로 도시 및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 애착, 귀속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공공 디자인은 심미적, 환경적 개선 가치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양산하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다. 공공 디자인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인 지역은 해당 지역으로 골드 칼라(gold collar)나 첨단산업을 끌어들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의 그라운드워크(groundwork)와 지역경제전략센터(the centre for local economic strategies)는 지역의 공공환경 향상이 경제적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다.

광범위한 영역의 공공 디자인

공공 디자인(public design)이란 도시 및 지역공간에서 수행되는 공적인 디자인으로서, 공적영역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용하기 쉽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통합적인 디자인 활동을 의미한다. 사적 영역일지라도 공공적 성격을 갖는 디자인 활동도 포함하여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주거나 상업공간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배려하기 위해 화분을 밖으로 내어 건다거나, 지붕이나 외벽에 다양한 시각적 설치물을 구현해 내었다면, 이는 공공디자인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공 디자인의 영역으로서 도시 및 지역공간에서 표현되는 공적 디자인 이외에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으로서 공공용품까지 공공 디자인의 대상영역으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물론, 구매용품 자체는 사적 상품으로서 사적 디자인에 속하는 것이지만, 구매한 공공용품에 해당 자치단체의 CI(city identity)나 BI(brand identity) 등이 표기되어 공적 영역에 표출되므로 이를 공공 디자인의 영역에 포함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표> 공공 디자인의 대상영역

구분		대상	
공적 영역	공공공간	도로, 운하, 공원, 산책로, 놀이터, 골목길, 시장 등	
	공공시설	건축물	공공청사(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약자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등
		가로시설	벤치, 버스택시 정류장, 지하철 입구, 공중화장실, 공중전화, 가로등, 쓰레기통, 재떨이, 자동판매기, 우체통, 화분, 가로수 등
	공공표지	광고, 게시판, 교통표지, 옥외광고물, 신호등, 교통표지, 파킹 미터, 가드레일 등	
	공공용품	공공청사 구매용품(게시판, 서류, 명함, 봉투, 컵, 기타 잡화) 등	
사적 영역	공공(배려)공간	개별주택 지붕·외벽, 공공주택 단지내 조경, 놀이터, 옥상 등	
	공공(활용)시설	공공예술, 옥외광고물, 자동판매기, 화분 등	

이렇듯 공공디자인의 대상영역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공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넓게는 도로, 운하 등 도시 및 지역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대상에서부터 아주 좁게는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서류 봉투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디자인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정책 영역은 매우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이 국정과제로 제시된 이후, 중앙부처 또한 공공디자인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자인이 문화임을 강조하면서, 공간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디자인엑스포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 교육 및 인식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로 산업디자인 부문을 담당하던 지식경제부도 산하단체인 디자인진흥원과 함께 공공디자인 개발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디자인 영역으로의 업무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에 초점을 맞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KOSIGN) 등을 개최하여,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려나가고 있다. 또한 도시·건축디자인과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09년 제1회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을 주관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관련 조직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의 디자인 서울총괄본부처럼 총괄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예도 있지만, 대다수는 해당 자치단체가 초점으로 삼는 공공디자인 영역에 따라, 도시국(도시계획국/건설교통국/도시교통국/도시경관기획단), 기획조정실, 관광문화국 산하에 관련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대체로 ‘도시디자인과’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담조직을 갖추고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공공디자인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들은 많다. 그러나 현재 자치단체 수준의 공공디자인 시책을 살펴보면 해당 부처의 공모사업에 따라 일부 시범가로 정비, 간판 정비, 가로시설물 교체 등 대부분 아주 지역적인 영역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공공디자인 시책은 찾아보

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각종 디자인엑스포, 디자인대전, 관련 시상제도 등 디자인 관련 행사가 남발되어 정작 공공디자인의 실제 사업내용이 되는, 도시 및 지역공간에 투영된 실질적인 디자인 개선보다는 디자인 전시 및 홍보 등에 치중되는 경향까지 발생하고 있다. 도시 및 지역이 지닌 고유한 장소성을 바탕으로 도시 및 지역공간에서 실제 삶을 영위하는 구성원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한 요소로서 표현되어야 할 공공디자인이 몇몇 자치단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거죽만 요란하게 치장하는 사업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디자인 전담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공공디자인 시책들이라 할지라도, 공공디자인의 특성상 도시 및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디자인이 실현되기 어려운 여건일 수밖에 없다.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로시설물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시설별·지역별 편차까지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범지구나 일부 가로시설물의 경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별 건축물의 외관,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 변경·교체까지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범지구내에서도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지난하며, 설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지구내 디자인의 통일성과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 겪어야 하는 주민의 불편은 간과되기 쉽다.

커뮤니티 디자인으로 공공디자인의 공공성을 높여야

공공디자인은 말 그대로 공적인 디자인을 의미한다. 디자인의 최종결과물은 도시설계, 건축, 조경, 공공예술, 시각디자인 등 전문영역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설계되겠지만, 최종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시공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공간에서 실제 삶을 영위하는 구성원의 공동의 가치가 담기지 않은 공공디자인은 ‘공공’ 디자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디자인이 디자인 폭압이 되지 않으려면 ‘커뮤니티 디자인(Community Design)’의 원칙으로 공공디자인 시책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즉,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미학적 논리에만 의존하여 쓸어내고 밀어내어 무조건 새롭고 예쁘게 치장하는 것만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공공성을 담아내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커뮤니티 디자인이란 커뮤니티, 즉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능숙한 전문 디자이너가 아닌 서투른 사용자, 즉 주민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주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주민의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실행해내는 것이다. 커뮤니티 디자인으로 지역이 활력을 얻게 되면, 그것은 거죽만 개선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림> 커뮤니티 디자인 원칙



커뮤니티 디자인 방식에서 행정과 전문가는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지역주민의 창의적인 발상을 유도해낼 수 있겠지만, 공공디자인을 주도할 수는 없다. 사실 커뮤니티 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별개의 디자인 수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공공성이 사라진 공공디자인 시책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록 커뮤니티 단위가기는 하지만 공동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커뮤니티 디자인 방식이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적극 도입·운영될 필요가 있다. 창의 디자인이란 주민의 생활 속에서 발현되고 실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